

민주 전당대회, 광주·전남 지방선거 판도 흔든다

박찬대·정청래, 호남 표심잡기 주력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 관심
지역 입지자들 유불리 쟁법 치열
조국혁신당 돌풍·진보정당 등 변수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진명(진이재명)계' 중심의 세력 재정비와 함께 공천 룰 개정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박찬대·정청래 의원 등 '진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후보 등록일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두 후보는 각각 호남을 방문해 당원과의 접촉을 이어가는 등 호남권 당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12만여명 중 약 33%인 37만여명이 몰려 있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당 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고 공천 룰도 확정하게 돼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방선거 입지자들 간 정치적 유불리 쟁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경선 방식이 관건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남의 경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해 입지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으나, 지난 대선에서 공천 룰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광주·전남이 경선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공천 룰 개정안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 조정이다. 현행 50대 50 반영 방식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조직력보다는 외연 확장에 유리한 후보에게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정 계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룰이 개편될 경우, 또 다시 '사천(私薦)'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 기간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수치화한 이 대통령 당선 기여도 등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과 예비 출마자 간 기여도를 놓고 내부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시원한 물놀이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7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여기에 지난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변수다.

정철원 담양군수의 당선이 호남에서 기존 거대 정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도에 균열을 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면서 조국

혁신당이 지역 정치권의 실질적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전 지역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탈락

한 인사들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은 경우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잡음과 탈당 도미노 등 내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尹 영장심사 내일 오후 2시15분... 직접 출석

영장 66쪽 분량... 체포저지 등 혐의 특검 "尹측 영장 유출... 엄정 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

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

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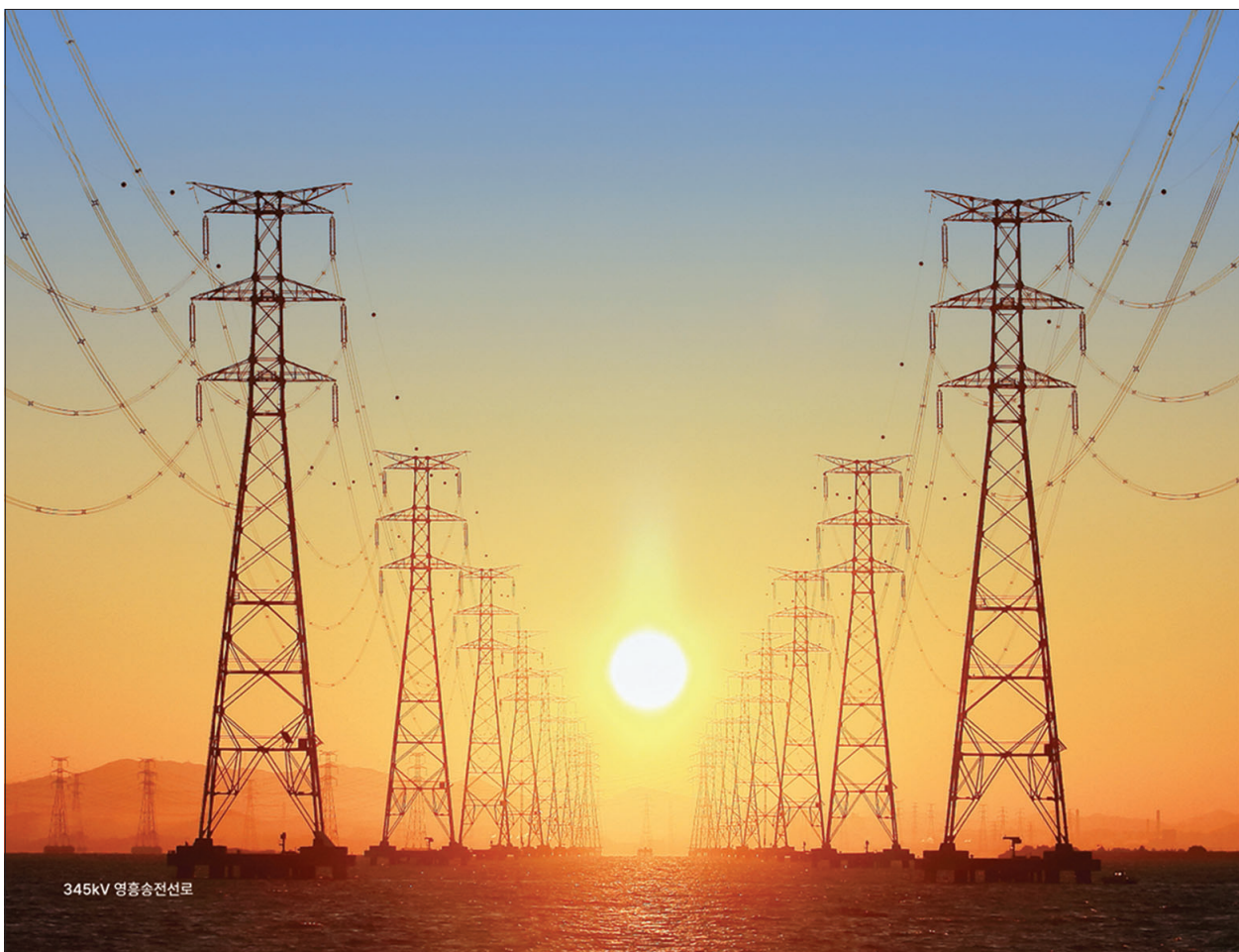
무집행행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으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345kV 영흥송전선로

함께 밝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전력망 확충에서 시작됩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